

# KDF

##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1월

제68호

#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서

이 원 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발행일 2022년 1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mailto: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서

이 원 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한반도평화행동 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는 현재 세계사적 위기 속에서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그로 인한 산업 구조의 전환, 미중 패권 경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위기와 그로 인한 (일국) 패권 질서의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국내적으로도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에 이어 지속가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 민주주의의 모델을 정착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는 소프트 파워를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힘을 앞세운 국제정치질서에서 대안적 리더십을 지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중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하는 '중간 리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세계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역사상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국가들은 불안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위기에 직면한 세계와 그 영향에 하에 있는 한국 사회는 변화의 시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무엇이며,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 1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전환

### 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이념 체계의 필요성

2021년,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세계를 전환의 기로에 서게 했다.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개입했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분류되었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잔여적 복지국가로 분류되었던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sup>1)</sup>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작은 정부, 국가의 시장 개입 최소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등을 내용으로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글로벌 이념으로 수용되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시장의 실패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한 이후 또 국가의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국제정치의 위기와 패권 질서의 변화

2007년~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등장한 G2 시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초기의 협력적 시간을 마감하고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패권 경쟁의 시간으로 진입했음이 분명해졌다.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파워로 국제체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sup>2)</sup>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4개국 협의체(QUAD)’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하여 중국은 반접근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미국과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 대립의 격화는 국제정치 질서의 불안정과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탈냉전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 유일 패권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 3) 기후 위기와 경제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이미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세계 각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대응은 기존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경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탄소배출 감축,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sup>3)</sup>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윤홍식,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2021년 06월). 참조.

2) The Whitehouse,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p.4.(<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Michiel Schaeffer, Ursula Fuentes Hutfilter, Robert Brecha, Claire Fyson, Bill Hare, “Insights from the IPCC Special Report on 1.5°C for Preparation of Longterm Strategies,” 2019. April. 참조. (<https://climateanalytics.org/publications/2019/insights-from-the-ipcc-special-report-on-15c-for-the-preparation-of-long-term-strategies/>)

목표치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국가들은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하여 경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감축과 친환경 원료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4) 위기와 세계 구조의 전환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차원의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가 역할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일색화되었던 글로벌 이념 체계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작되었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국제정치적 측면과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단극 패권 구조에서 신냉전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비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란 전체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즉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세계 체계에 구조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응답한 세계의 구조적 전환이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의 구조적 전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 2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갈등의 변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 세계의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에 대해 각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기반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대응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 자유화로 사회적 패러다임<sup>4)</sup>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구성되었다.

### 1)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산업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자원의 분배에 있어 권위주의 정권이 직접 시장에 개입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출발했던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거쳐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000년대에 급격한 발전을

4) 패러다임 개념에 대해서는 Thomas S. Kuhn, 김명자·홍성욱 역, 『과학혁명의 구조』 제4판, (서울: 까치, 2021). 참조.

이런 국가들과 함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는 2020년 현재 GDP 기준 세계 9위, 수출금액 기준 세계 5위의 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은 종식되었고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과 민주주의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민주화의 제3의 민주화 물결, 제4의 민주화 물결<sup>5)</sup>을 통해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선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권위주의로 후퇴한 것과 비교하여 모범적인 민주화(democratization)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화 패러다임과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IMF의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의 구조조정 요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었다. 그 결과는 고용 유연화, 무역 장벽 철폐,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 탈규제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의 전면적 수용이었다.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저성장과 고용 불안정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현상이 등장했다. 이 영향으로 노동 안정성 문제, 수입 개방 문제, 해외 금융 자본의 기업 인수 합병과 철수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으며, 복지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 2)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의 변화

산업화 패러다임 시기 가장 주요한 정치적 대립 전선은 민주 vs. 독재였으며, 이 시기 시장은 국가가 주도한 계획에 순응하면서 국가와 유착한 재벌 주도 경제로 성장했다. 그런데 민주화 패러다임 시기 재벌 체제는 국가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산업화 패러다임이 민주화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면서 비록 그 유산은 잔존해 있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의 종식과 경제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후퇴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민주화 패러다임 시기에 나타난 갈등의 변화는 지역 갈등과 노사 갈등이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갈등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5)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을 세계사적 조류로 분석한 헌팅턴(Huntington)은 19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립을 제1차 민주화, 2차 세계대전 직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립을 제2의 민주화 물결,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제3세계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 이행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을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지칭했다. 제3의 민주화 물결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Volume 4: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3). 참조. 그런데 그랜드(Grand)는 2010년대 아랍 국가들에서 나타난 민주화 시위에 대해 ‘제3의 민주화 물결’과 또 다른 ‘제4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는 Stephen R. Grand, “Starting in Egypt: The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Brookings Institute, (February, 2011). 참조.

갈등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 vs. 독재의 전선이 진보 vs. 보수의 전선으로 변화되었으며, 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에 정규직 vs. 비정규직의 갈등이 더해졌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 프레임’에 입각하여 청년 세대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민주화 운동 세대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불신하고 있다. 또한 젠더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젠더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수용을 거부하고, 페미니즘을 남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이대남 현상’이 등장했다.

### 3) 갈등의 복잡성과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적 갈등은 기존의 산업화·민주화·(신자유주의)자유화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 패러다임 시기의 권위주의는 개발 독재 체제였다. 이 시기는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자원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효율성에 방점을 둔 ‘국가 계획주의적,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이었으며,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패러다임은 민주주의의 이행을 통해 민주화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산업화 시기의 누적된 문제들이 1997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산업화 패러다임은 현실에서 실효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산업화 패러다임을 대체했던 민주화 패러다임은 민주적 선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작동되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평등까지를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sup>7)</sup>. 1997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민주화 패러다임은 외삽된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복지 의제가 주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로 부상했으며,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코포라티즘적 갈등 해결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렇지만 충분한 노사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국 코포라티즘의 주요한 갈등 해결 방안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무능과 정치적 기득권으로 작동하고 있는 폐쇄성과 진영 논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 해결의 유효한 패러다임으로서 적실성은 약화되었다. 즉 민주화 패러다임 틀만으로는 현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결

6)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은 한국과 일본 등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고 명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C.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P.Evans,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7) 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정치제도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와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평등까지를 포함하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방안에 대한 모색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의 원인 제공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이 고착되었으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된 이면에는 단기적 자본 이윤 추구라는 자유화 패러다임의 핵심 목표가 존재한다. 단기적 자본 이윤 확보를 위해 금융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특히 일국적 경계를 넘는 자본의 (이동) 자유화가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금융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으며, 기업 인수합병 역시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꼭 악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에의 권력 집중은 노골적이고 공개적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이 야기한 자본에의 권력 집중은 결국 노동의 배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상층부에 진입하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소멸시켰다.

결국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3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sup>8)</sup>

#### 1)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단기적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가 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의 확대를 야기하여 자본 이윤의 원천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는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 체계의 안정을 파괴한다. 특히 핵무기와 대륙 간 경계를 넘는 핵 투발 수단을 보유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다면 과거의 세계대전과는 다른 양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은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구조적 전환의 지향점은 자기파괴적 속성의 극복이다.

UN은 이미 지난 2015년, 자기파괴적 발전을 지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형태와 모든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존엄과 평등 속에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구를 위하여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지원할

8)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속가능 민주주의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하고, 지구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하는 등 지구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번영을 위하여 “모든 인간이 풍요롭고 보람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평화를 위하여 “공포와 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며, 평화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하여 “강화된 글로벌 연대의 정신에 기초하고, 특히 최빈곤층과 최취약층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 및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활성화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이행에 요구되는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의했다.<sup>9)</sup>

## 2)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UN의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구체적으로 국가들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갈등은 UN에서 제기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에 포괄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제기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굿 거버넌스’ 과정,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과거 산업화 패러다임의 시기에서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민주화 패러다임의 경험으로부터 시민적 저항과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의 경험으로부터 자본(혹은 시장)의 저항이라는 이중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야 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강화로 귀결된다. 민주화 패러다임을 통해 성취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자유화 패러다임을 야기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강화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가 작동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색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속가능 민주주의’ 패러다임과 미래 개척 논쟁

‘지속가능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직면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는 이전과 같은

9) UNDP,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https://www.ua.undp.org/content/ukraine/en/home/library/sustainable-development-report/the-2030-agenda-for-sustainable-development.html?utm\\_source=EN&utm\\_medium=GSR&utm\\_content=US\\_UNDP\\_PaidSearch\\_Brand\\_English&utm\\_campaign=CENTRAL&c\\_src=CENTRAL&c\\_src2=GSR&gclid=EAlalQobChMIppet3Zv99QIV2dVMAh1f3A6mEAAYBCAAEgKglPD\\_BwE](https://www.ua.undp.org/content/ukraine/en/home/library/sustainable-development-report/the-2030-agenda-for-sustainable-development.html?utm_source=EN&utm_medium=GSR&utm_content=US_UNDP_PaidSearch_Brand_English&utm_campaign=CENTRAL&c_src=CENTRAL&c_src2=GSR&gclid=EAlalQobChMIppet3Zv99QIV2dVMAh1f3A6mEAAYBCAAEgKglPD_BwE))



삶의 양식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변화된 삶의 양식 중 많은 부분이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위기 극복 재정 지출이 일상적인 이전 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온-오프라인의 병행으로 지속될 때 교육·금융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나타나는 갈등-노사 간의 갈등, 경쟁과 규제를 둘러싼 갈등 등-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논쟁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과제에 대한 의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수소차 등과 같은 산업적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 등, 광범위한 산업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 문제, 친환경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 원전을 둘러싼 갈등 및 기후 위기를 둘러싼 정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보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논쟁이 필요하다.

셋째,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담론과 전략적 선택의 준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준비되어야 한다. 통일에서 평화로 이어져 내려온 통일-평화 담론은 북핵 고도화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전략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우리에게는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협력할 것인지 등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은 옛 패러다임의 명료화나 확장에 의해서 성취되는 과정, 즉 누적적 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sup>10)</sup> 이 말은 당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기존의 패러다임 틀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때, 또는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때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기한 대안의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 민주주의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검증된 바 없는, 담론적 주장이기 때문에 적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지속가능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논쟁을 통해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1)</sup>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미래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굿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에까지

10) Thomas S. Kuhn, 김명자·홍성욱 역, *op.cit.*, p.175.

11) 이러한 논쟁을 위하여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올해 매월 월례 포럼을 통하여 기후 위기, 젠더 갈등, 한반도 평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주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고, 월례 포럼에서 진행된 논쟁을 정리하여 KDF 리포트를 발간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르게 될 때,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의 소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양적 지표로서의 선진국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4 맺는말 : 대안적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산업화 패러다임이나 민주화 패러다임은 고전적인 경제 발전 모델이나 민주주의 모델과는 다른 경로로 발전해 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달성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된 국가들이나,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다시 권위주의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많은 아시아의 ‘중간 국가(middle power)’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갈등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세계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대응의 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중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의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평화 소프트파워(peace soft power)’를 지닌 국가로, 힘(power)을 앞세운 국제정치질서에서 대안적 리더십을 지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로에 서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2022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서

**발행일** 2022년 1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